



「문화안보포럼」 창립기념 연속세미나(1)

“문화안보의 시대를 열다”

일 시 | 2017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바비엡3차 612호)
주 최 | 대한민국문화예술인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 관 | 문화안보포럼

【 프 로 그 램 】

시 간	주요 내용
09:30~10:00	등록
10:00~10:05	인사말/ 참석자 소개
사회 : 왕치선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	
10:05~11:05	【발 제】 문화안보의 필요성 - 이용남(청주대 영화과 객원교수)
	【토론 1】 문화계의 反대한민국 정서에 대하여 - 고우성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자문위원장)
	【토론 2】 문화계 이념편향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토론 3】 표현의 자유를 다시 말하다 - 여명 (청년박정희연구회 부회장)
11:05~11:25	종합토론

【 목 차 】

발 제

- 문화안보의 필요성 _____ 09
: 이용남(청주대 영화과 객원교수)

토 론

- 1. 문화계의 反 대한민국 정서에 대하여 _____ 21
: 고우성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자문위원장)
- 2. 문화계 이념편향이 사회 · 경제에 미치는 영향 _____ 24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3. 표현의 자유를 다시 말하다 _____ 29
: 여명 (청년박정희연구회 부회장)

「문화안보포럼」 창립기념 연속세미나(1)

“문화안보의 시대를 열다”

발 제

[발제]

문화안보의 필요성

이 용 남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객원교수

대한민국은 좌경화 되었다.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패망 위기에 봉착했다. 법치와 헌법이 무너졌다. 거짓이 진실을 이겼다. 종북 좌익세력의 섬뜩한 광기와 증오로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현실적 위기감은 단순한 기우일까.

탄핵사태는 대한민국이 문화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결과다. “문화를 점령하라”는 김일성의 비밀 교시에 따라 종북 좌익세력은 대한민국 흔들기에 돌입한다. 자주, 평화, 민주, 민족, 통일, 진보 같은 용어전쟁과 이념전쟁을 통해 386세대들의 의식을 잠식했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공고하게 구축해왔던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가 와해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 거리와 광장에서 기동전에 주력하던 종북 좌익세력과 추종세력은 1980년대 말부터 진지전으로 투쟁 방식을 전환한다. 이 시기 제일 먼저 진출한 진지가 문화예술계다. 대표적인 예가 1988년 12월 23일에 설립된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이하 민예총)’이다.

종북 좌익세력은 김영삼 정부에서 각 분야의 진지 진입에 성공한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주류 제도권으로 부상한다. 이를 토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권력의 시스템을 확립하게 된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권력은 종북 좌익세력이었다. 그들이 문화전쟁 전범의 주체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대한민국의 좌경화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내부의 적인 종북 좌익세력은 경제 분야를 제외한 사회 전 분야에서 기득권이 되었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국민들의 의식과 감정을 좌경화 시켰다. 특히 대중문화를 통해 국민을 감정적으로 선동하며 사회를 분열시켰다.

대통령 탄핵은 좌파 문화권력이 만든 사회분열이 국가안보에 더욱 치명적임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다.

문화전쟁의 위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다. 문화전쟁의 심각성을 모르는데 문화안보는 더더욱 알리 만무하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종북 좌익세력을 안다고 생각했던 오만과 무지, 침묵과 방관의 결과다.

오관하지 말자.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외피적으로 정전상태이지 내피적으로는 계속 전쟁 중이다. 단지 ‘화력소모전’에서 ‘문화전쟁’으로, ‘외부의 적’에서 ‘내부의 적’으로 전쟁 양상이 바뀐 것뿐이다.

이 사실을 정확히 간파한 우파 문화예술단체 ‘대한민국문화예술인’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문화전쟁과 문화안보를 외쳤지만 모두 허공에 외치는 창백한 메아리가 되었다.

종북 좌익세력은 철저하게 자신을 민주주의자 혹은 평화주의자로 위장해 각자의 진지에서 문화전쟁을 수행하며 끊임없이 내부분열을 조장했다. 서서히 국민의 의식을 좌경화시켜 국민 스스로가 혁명 세력의 진정한 일원이 되어 광장의 촛불이 되게 했다. 대한민국에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꿈꾸었던 혁명의 진지전(war of position)은 이렇게 실현되었다.

문화전쟁은 심리적 핵폭탄이다.

문화전쟁은 핵폭탄급 위력을 지니고 있다. 문화전쟁은 국민들의 의식과 감정을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키는 심리적 핵폭탄이다.

대표적인 예가 1975년 월남 패망이다. 당시 월맹의 간첩으로 월남을 패망에 이르게 했던 ‘쫓던주(월남 대선에서 2위를 했던 야당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선전선동했다. “미군이 같은 민족인 월맹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같은 민족인 우리 민족을 더 이상 살상하지 말자.”, “월맹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월맹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을 죽이는 저 미군들을 내보내자.”

미군이 철수할 때 월남 대통령에게 물었다. “휴전중인데 우리가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대통령은 대답했다. “월맹은 공산주의로 가난해졌고, 거의 굶어죽어서 사람이 없다. 우린 다수지만 그쪽은 힘 없는 소수고 더 이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떠한가. 강렬한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는가.

문화전쟁의 무기는 프레임이다. 프레임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의 방향을 지배하는 것이고 국민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종북 좌익세력의 선전·선동 프레임에 감염된 국민은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는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된다.

문화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구조화하고, 여가시간을 지배하며, 정치적 관점과 사회적 행동을 구성하고, 정체성 형성의 재료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문화는 국민을 사고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막강한 힘이 있다.

대중문화는 국민의 사고와 행동에 더욱 강한 영향을 준다. 대중문화는 문화전쟁의 최대 격전지다. 특히 스타가 주도하면 그 파장력과 파괴력의 최대치는 핵폭탄의 위력에 맞먹는다. 문화전쟁이 무서운 이유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전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화안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전쟁

좌익세력은 1910년대 말 ‘고려공산당’, 1920년대 ‘조선공산당’, 1945년 해방 후 ‘남조선로동당’으로 활동하면서 1946년 10월 대구 폭동, 1948년 제주 4·3 사건, 1948년 10월 여수·순천 반란사건으로 대한민국의 탄생과 건국을 방해했다.

좌익세력의 문화전쟁 역사는 뿌리가 깊다. 먼저 1925년에 결성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이 있다. 이 단체는 문학을 비롯하여 연극·영화·음악·미술 등 각 분야에서 문화예술을 사회주의 혁명의 실천 수단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1946년 조선공산당의 주도 하에 남한의 29개 좌익단체가 결성한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이 있다. 민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로 ‘조선영화동맹’과 ‘조선문학가동맹’이 있다.

조선영화동맹은 ‘조선영화건설본부’와 ‘조선프로레타리아영화동맹’이 통합해 조직한 단체로 두 단체 모두 좌익영화 단체다. ‘조선문학가동맹’은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이 통합해 결성된 좌익문학 단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좌익 활동에 대한 근거가 급속히 약화되면서 소멸되었다.

1950년 6·25 남침전쟁은 1129일 동안 한반도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북한은 1961년 이후 대한민국

의 적화를 위한 대남 공작을 무장투쟁에서 문화투쟁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대남한 문화침투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내부를 분열시켰다.

김일성은 1976년 8월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에서 “남조선에서 들어온 영화, 비디오를 보니까 거기에도 재능 있는 작가 예술인들이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잘 나간다는 몇몇 작가들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가 실업자나 다름없는 형편이다. 이들에게 혁명적 세계관을 심어 주기만 한다면 훌륭한 걸작들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하당 조직들은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을 더 많이 포섭하여 혁명가로 만들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뽕뽕 뭉쳐서 혁명적 필봉을 들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묶어 세워야 한다.”고 교시했다. 교시의 성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에서 조금씩 나타났다.

1980년대 말 중북 좌익세력은 소련의 붕괴와 공산주의 와해로 기동전의 효과가 사라지자 전술을 바꾸어 각 분야별로 진지 구축에 나선다. 문화예술은 첫 타겟이 되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로 출범하여 1987년 확대 개편한 ‘민족문학작가회의(한국작가회의로 명칭 변경)’가 있다. 민족문학작가회의는 2005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문학작가대회를 평양, 백두산, 묘향산에서 개최했다. 2006년에는 금강산 호텔에서 6·15민족문학인협회를 결성했다.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을 했으며, 2010년부터는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전교조 출신으로 2001년 임수경, 황석영과 함께 방북한 전력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있다. 방북 당시 이들은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했다. 정부에 불참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한반도가 공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념물에 헌화한 인물이다.

다음으로 ‘민족미술협의회’는 1985년에 창립한 단체다. 민족미술협의회는 1995년 전국민족미술인 연합을 결성하고, 2000년에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민미협)’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민중미술 1세대 이론가인 김윤수가 있다. 1987년 북한을 찬양하는 〈모내기〉를 그린 신학철과 편향된 시선으로 제주 4·3 사건을 표현한 강요배가 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한 〈더러운 잠〉의 이구영도 민미협 소속이다.

좌파 문화권력의 핵심인 민예총도 있다. 문학계를 주축으로 미술, 음악, 춤, 민족극, 전통연희, 사진, 건축, 영화 분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문화전쟁이 본격화되었다.



민예총은 1993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경기·인천·부산 등 53개의 지부와 지회를 개설했다. 민예총을 중심으로 남북문화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되면서 대북 적대감이 완화되었다. 이들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을 악용해 국민을 선동했다.

서울대학교의 ‘알라성’같은 영화 동아리와 소규모 영화 클럽들은 “영화는 혁명을 위한 총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민중영화 운동을 전개했다. 운동권 학생의 고민을 그린 〈인재를 위하여〉(1987, 장운현), 광주사태의 배후 조종자로 미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오! 꿈의 나라〉(1989, 이은, 장동홍, 장운현), 노동자들의 파업을 그린 〈파업전야〉(1990, 이은, 장동홍, 장운현, 이재구), 〈어머니, 당신의 아들〉(1991, 이상인) 등이 대표적인 민중영화 작품들이다.

이태(본명 이우태)의 자전적 소설 〈남부군〉(1988)은 빨치산을 미화한 작품이다. 1990년 정지영 감독이 영화화했다. 조정래는 대하소설 〈태백산맥〉(1989년)을 통해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주사파(主思派)의 교과서였던 이 소설은 1994년 임권택 감독이 영화화했다.

리영희는 〈8억 인과의 대화〉(1977), 〈전환시대의 논리〉(1999),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2006) 등의 저자이며 좌파 이념의 대부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1980년대 이후 종북 좌익세력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의 핵심적 논리는 마오쩌둥에 의해 펼쳐진 중국 공산주의혁명과 그 체제를 미화한 것이며 그의 방향성은 항상 사회주의와 북한이었다.

백낙청은 1966년에 창간한 『창작과 비평』의 편집인이다. 그는 문학을 수단으로 좌익정치 활동에 나섰다. 잡지를 통해 좌익 학술운동의 장을 제공하던 그는 북한 대남혁명투쟁 3대과제인 반미자주, 반파쇼민주, 연방제통일과 맥락을 같이하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음악인 윤이상에 대해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김일성에 충성했고 음악마저도 김일성이 교시하는 조국통일을 위해 사용했다.”, “92년 공안기관이 밝힌 것처럼 윤이상은 북한의 조종을 받아 활동하는 대한민국을 허무는 데 전력해온 북한의 문화공작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1982년부터 윤이상 음악제가 매년 개최되었다. 통영의 서호동 해방다리에서 해저터널까지의 구간은 2001년부터 ‘윤이상 거리’로 명명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통영국제음악제의 주관으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가 매년 개최된다.

김영삼 정부(1993년~1998년)가 들어서자 종북 좌익세력은 민주화의 대가로 각 분야의 진지에 진입하면서 급속한 성장과 확장을 가져온다.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역사계, 문화계, 정치계, 연예계, 노동계, 스포츠계까지 이들의 침투활동은 성공적이었다. 『진보』(1994년 9월호)에 실린 유병일의 글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라는 글을 보면 이미 1994년에 종북 좌익세력이 문화적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1998년~2003년)에서는 종북 좌익세력이 주류 제도권으로 부상한다. 특히 전교조와 민노총이 합법화 된다. 전교조가 좌경화 프레임의 구조를 짜고 역사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 부정,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왜곡, 국군 부정, 625 전쟁의 양비론적 관점, 북한 체제 옹호(수령, 체제, 주체사상, 세습, 북한인권), 반미와 반일정서를 주입시켰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반(反)대한민국 시위에 적극 동참했다.

김대중 정부의 문화전쟁 표적은 영화계였다. 배우 문성근과 명계남이 새천년국민회의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충무로 포럼’을 통해 기존 영화인들과 정책을 비판하면서 영화계의 좌파 문화권력을 구축했다. 그 결과 영화법을 영화진흥법 체제로 바꾸고, 영화진흥공사를 영화진흥위원회로, 공연윤리위원회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개편했다.

이 시점부터 영화계는 민족(반일 정서와 ‘우리민족끼리’의 민족의식), 민중(반정부, 반기업, 반사회, 반미, 반 대한민국 정서), 민주(5·18과 356운동권)의 삼민주의 프레임 영화가 집중적으로 제작되면서 대중영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좌경화가 본격화 된다.

영화계 좌파 문화권력과 정치권(더불어 민주당)은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19대, 20대 국회)으로 계속 연대하고 있다. 이는 삼민주의 프레임과 선거용 기획영화가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상영될 수 있는 원동력이자, 부산전주부천 국제영화제와 독립영화계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2003년~2008년)에서는 확고한 좌파 문화권력 시스템을 확립한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전쟁 표적은 지원금과 기관 장악이다.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민간 주도로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문

화예술계의 돈줄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문화예술계의 통제 기관을 만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돈과 조직을 좌파 문화권력에 집중했다. 대표적인 수혜 단체가 민예총과 문화연대다. 당시 민예총 지원은 늘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지원은 감소했다. 실제로 회원 10만 명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던 민예총은 2000년 2억 5000만원, 2004년 5억 8000만원으로 지원금이 증가했다. 2006년에는 회원 38만 명의 예총은 19억 원, 민예총은 22억 원으로 역전된다.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는 지독할 정도다. 진지 구축은 문화 현장에도 있지만 공직과 각종 정부 위원회까지 침투했다. 현기영(민족문화작가회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윤수(민예총)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철호(민예총) 국립국악원장, 한국영상자료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11명 중 9명), 장관 정책보좌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국립연극원장, 문화재청장 등 거의 민예총 인사들이다.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도 민예총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의 지원금과 코드인사는 구복지계(口腹之計)를 찾는 문화예술인을 좌익 세력으로 흡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좌파 문화권력 시스템을 통해 전방위적인 좌경화가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에서 기울어진 문화예술계의 균형을 맞춰보려고 사령관(기관장)들을 교체했다. 그러나 사령관이 바뀐다고 저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조직 안에서 그들끼리 힘을 모아 사령관을 내쫓는 현상이 일어났다.

박근혜 정부(2013~2017)는 사령관 교체만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문화권력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편향된 ‘지원’의 문제점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지원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바로 ‘문화융성’이란 슬로건이었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명기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국민세금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권한의 불법행사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대통령의 합법적 국정수행이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안보리스트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비판하고 전복하려는 세력들에게 단 1원의 혈세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준수한 문화안보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전 비서실장과 장관을 구속했다는 사실이 국정농단이자 내란이다. 이제라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문화전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확립한 문화권력으로 대한민국의 좌경화라는 위기를 만들었다. 이제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남았다. 종북 좌익세력의 좌경화 선동에 대응할 깨어있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바로 문화안보다.

문화전쟁 시대에는 문화안보가 절실하다

문화전쟁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보의식은 ‘문화안보’다. 변화된 전쟁 양상과 환경에서 국가 안보의 개념과 범위는 ‘국가’와 ‘통일’에서 ‘문화’로 확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다. 문화안보는 첫째, 친북종북 좌경화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지키는 안보의식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자유화를 준비하는 미래정신이다. 넷째, 이념 편향성이 없는 문화예술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안보는 총체적 위기다. 지난 탄핵 촛불시위에서는 청소년들이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청소년이 앞장서서 헬 조선을 갈아엎자”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자본주의 아웃”, “사회주의가 정답이다”,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시위 구호도 등장했다.

2004년에는 육사 신입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는 질문에 34퍼센트가 미국, 33퍼센트가 북한이라고 답했던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반대하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서울시장도 있다.

세월호는 기억하지만 ‘서해수호의 날’은 잊고 있는 미래 세대들이 있다. 심지어 연평해전을 픽션 영화로 알고 있는 대학생들도 있다. 김일성 찬양가인 〈충성의 노래〉를 만든 윤민석의 노래 〈이게 나라냐 ㅅㅂ〉을 불러 제끼는 어린이도 있다.

〈화려한 휴가〉, 〈광해, 왕이 된 남자〉, 〈26년〉, 〈남영동1985〉, 〈지슬〉, 〈더킹〉, 〈공조〉, 〈눈길〉, 〈보통사람〉, 〈특별시민〉, 〈1987〉, 〈임을 위한 행진곡〉, 〈택시운전사〉, 〈대장 김창수〉처럼 대선시즌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선거용 기획영화들도 있다.

〈세월엑스〉처럼 ‘괴물체 충돌설’을 제기한 네티즌 자료의 다큐멘터리와 〈인텐션〉처럼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선동하는 영화도 있다. <판도라>처럼 원자력발전소 폐지, <7년-그들이 없는 언론>처럼 방송법 개정, <자백>과 <메멘토모리>처럼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말하게 하는 영화도 있다.

JTBC, YTN, 채널A, 뉴스Y, TV조선, SBS, MBN, KBS가 똑같이 오보·왜곡 편파 방송의 끝을 보여준다. 종편은 가짜 뉴스와 저급한 평론을 토해낸다. 교통상황을 방송해야 하는 tbs 교통방송(서울시 관할)은 나꼼수의 김어준과 정봉주, 세월호 유민 아빠 김영오까지 진행자로 내세워 하루 종일 정부 비난하기에 바쁘다. 가수 안치환과 신해철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박찬욱, 조국, 진중권, 김제동, 김장훈, 신대철 같은 강남좌파들이 개념인이 되는 세상이다.

사드 배치처럼 대한민국에는 이득이 되고, 북한에는 불이익이 되는 법과 정책들을 반대하는 좌경화 세상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문화안보 인식과 의식 부재라는 ‘문화안보 불감증’이 만든 결과다. 순진한 믿음을 버려라. 이념전쟁에서 협상이란 없다. 언제나 악마는 천사라는 탈을 쓰고 미소 짓는다.

이제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문화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개인이 문화안보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무너진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문화안보로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자

올바로 직시해야 한다. 문화안보의 실패가 부를 사회적·경제적 위험을 이번 탄핵사태를 통해 통감했다. 이제 문화안보 시대를 열어야 한다.

다음은 준비해보자.

첫째, 문화안보의식 교육. 초·중고 자유학기제, 대학교 교양교과목, 군대 안보교육, 평생교육원과 문화센터 강좌, 시민단체 강좌, 지역 주민 강좌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 문화안보 인력 양성. 문화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파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실용적인 교육 방법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셋째, 좌파 문화권력 감시. ‘문화권력시민감시연대’나 ‘문화소비자연대’ 같은 시민단체를 설립해서 문화안보 관점과 편향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한다. 감시와 정화를 통한 문화권력의 균

형과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 이념과 가치가 담긴 콘텐츠 생산. 이제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는 없다. 문화를 제대로 바라보고 성찰할 때이다.

문화안보 더 이상 늦으면 진다. 문화안보는 대한민국의 심폐소생술이다. 멈추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 아직은 희망이 있다. 41일의 시간동안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 태극기의 눈물을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각 분야에서 전략과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 중북 좌익세력을 이겨야 한다. 현실을 직시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대한민국은 다시 전진해야 한다.

「문화안보포럼」 창립기념 연속세미나(1)
“문화안보의 시대를 열다”

토론

[토론①]

문화계의 반(反)대한민국 정서에 대하여

고 우 성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자문의원장

금번 탄핵사태를 문화안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 교수님의 시각에 동의합니다. 문화안보는 종북 좌파의 반 대한민국적 가치의 선전·선동에 대항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가치관을 수호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좌파와 우파 간 단순한 세력다툼이 아니라 국가존망과 직결되는 문화전쟁인 것입니다. 이 교수님의 발제문에 문화전쟁, 문화안보 등 다소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지만 제게 주어진 ‘문화계의 반 대한민국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본 발제문에서 탄핵 인용은 종북 좌파의 혁명 진지전이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탄핵을 둘러싼 촛불세력과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리는 좌파와 우파 간의 세력 대결을 대한민국과 반 대한민국 세력 간의 가치관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사태가 사상전쟁이며 문화전쟁으로서 국가존망과 관련된 문화안보문제라고 경각심을 고조시킨 점에 동의합니다. 문화전쟁은 단순히 박근혜 정권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세력 간의 갈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확립이라는 국가안보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님은 대한민국은 문화전쟁을 통해 알게 모르게 점차 좌경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동원된 수백만의 인원과 국가보안법을 무색케한 격렬한 종북 좌경적 구호를 보면서 그 심각성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를 우려하여 뒤늦었지만 등장한 것이 태극기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고 황장엽 선생님은 1997년 망명시 “남한 내에 고정간첩 5만명이 암약하고 있으며 이들은 권력 핵심부에도 침투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고 황장엽 선생님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교수님은 반 대한민국 세력에 의한 문화전쟁의 역사는 일제 식민지 시기 공산당 운동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해방 전후의 남노당과 빨치산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6.25 전쟁이후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한내 좌경화를 위한 문화전쟁의 역사는 1960년 4.19혁명이라는 호기를 놓친 김일성이 1961년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무장투쟁에서 문화투쟁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은 2003년 10월 동북아전략연구소와 2004년 6월 일본 산케이신문이 5회에 걸쳐 연재한 소위 '김일성 비밀교시'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한 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작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일성 특별 교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한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종북 좌파 세력은 '민중예술의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영화, 연극, 사진 및 심지어 국악 등 전통 예술분야에까지 그 세력을 침투시켜 문화계의 좌경화 공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에 의하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꿈꾸었던 혁명의 진지전을 위한 첫 번째 혁명투쟁의 진지가 구축된 것이 바로 문화예술계이며, 대중문화는 진지전에 있어 문화전쟁의 최대 격전지라는 것입니다.

종북 좌파에 의한 문화계 권력 장악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전후해 대세로 등장했으며, 특히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 (1998-2008)간에 공고화되었고 반면에 이를 무력화 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노력은 아쉽게도 무위에 그쳤습니다. 이문열 작가의 주장대로 98%의 문화계를 종북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력은 최근 탄핵인용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국가보안법 철폐, 재벌개혁, 역사 교과서 문제 등 그간에 노정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주요 쟁점들은 그 심층을 들여다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말살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는 종북 좌파에 의한 반 대한민국 문화전쟁인 것입니다. 문화전쟁은 총성없는 이념전쟁입니다. 결과로서 대한민국 사회를 남남갈등 상태로 내몰아 무지한 대중의 안보 불감증을 불러 일으

키고 있습니다. 고 황장엽 선생님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의 최대 잘못은 한·미 갈등이 아니라 남·남 갈등이라고 개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북 좌파의 반 대한민국적 문화전쟁은 탄핵사태가 끝나더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종북 좌파의 반 대한민국 정서를 불식시키고 이념 편향성 없는 건강한 문화예술계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안보적 시각에서 조속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 교수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 가지 질의

첫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종북 좌파 문화권력을 바로 잡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사령관 교체 대신 '문화융성'이란 슬로건'하에 종북 좌파에게 주는 비정상적인 지원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데 이것이 실현되었다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북 좌파의 문화권력 장악의 배경과 요인으로 ① 김일성 특별교시에 따른 대남 문화예술인 포섭 정책, ②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의 종북 좌파에 대한 비정상적 제도적·물질적 지원, ③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종북 좌파 문화권력 척결 정책 실패 등을 들고 계시는데, 조우석 평론가가 지적한 조정래, 리영희, 백락청 등 종북 좌파 숙주 3인방의 문화계 좌경화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자기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어떤 사상을 가졌다거나,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면 바로 어린 영혼들과 무지한 대중은 자기들의 우상이 지지하는 사상과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문화안보적 대응방안으로 4가지를 제안하셨는데 조직면에서 전교조와 노무현 정권 당시 3대 문화 권력이었던 민예총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작가회의·문화 연대에 대한 대항마를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닌지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두신다면 어느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항목으로 제안하신 종북 좌파 문화 권력 감시연대에 대한 구상과 실효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토론②]

문화계 이념편향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 정 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1. 문화의 정치성에 대한 철학적 검토

프랑스 사회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라는 개념으로 문화권력의 본질을 탐구했다.

아비투스(habitus)란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향,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체계를 의미한다. 집단 내에 존재하는 동질적 특성과 집단 간에 존재하는 배타적 이질성으로 계급구성원들의 문화적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지식인과 예술인의 성향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장(場)에서 계급적으로 형성된다. 그에게 사회란 구조물이 아니라 개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망이고, 그러한 관계망 속에서 지식인과 예술인은 알튀세르가 지적한 바처럼 ‘호명(呼名)’된다.

이렇듯, 한 문화예술인의 저작은 그 사회의 場 안에서 결정된다. 지식사회학적 접근 방식에 의하면 순수한 개인의 창작물이란 없으며, 창작자의 의식은 그가 속한 여러 중층적 장들에 의한 반영물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은 결국 사회적 이념과 가치간에 충돌점으로부터 운동성을 가진 헤게모니를 위해 경쟁하는 양상을 노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좌파 지식인인 부르디외의 논지와 알튀세르의 호명론을 우파가 수용할 수 있다면 문화는 곧 정치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정치성이란 다양성을 하나의 기획으로 만드려는 노력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질성들간에 대립관계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상하다. 왜 문화적 다양성을 굳이 하나의 기획으로 만드려는 정치성이 필요한 것일까.

그렇게 되는 데는 그 사회가 놓여있는 ‘구체적 현실’ 때문이다. 한 사회의 현실은 개인들이 갖는 목적과 처지의 개선 욕구로 인해 동력을 갖고 변화하려 든다. 일제시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문화인들 중에는 독립과 해방을 꿈꾸었던 이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의지의 차원에서 그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민족주의 예술문화를 지향했다. 반면 일체의 현실을 포기하고 도피하는 작품들도 등장했다. 해방 후 좌-우간의 갈등은 문학인들로 하여금 공산 혁명에 예술을 도구화하는데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 그 관성의 힘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문화영역을 좌파일색으로 만들고 있다.

보수주의 정치철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thing)의 본질을 ‘적과 동지의 질서’로 파악했다. 이때 적(Enemy)이란 타자로서의 이질성을 띠는 약한 갈등으로부터 무력으로 대결해야 하는 극단적인 적대성까지를 포함한다.

‘문화전쟁’이란 바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문화전쟁은 곧 정치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가치투쟁의 양상이기도 하다. 문화계 종사자라면 본인이 원하는 원하지 않은 이 문화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다. 이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라는 존재론적인 문제다. 따라서 문화가 갖는 정치성으로부터 우리는 승자와 패자라는 결과적 현실을 얻는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좋은 것(Good)인가’라는 판단이다.

이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를 위해 “올림푸스의 신들이 방탕하다”거나, “전쟁에 나선 장군들이 인간적인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시인들의 싯구절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에서도 제기된다. 현명한 소크라테스가 시인들의 불경한 시를 검열하고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그가 파시스트여서가 아니라, 아테네가 처한 구체적 현실 때문이었다. 당시 아테네는 전쟁의 소용돌이속에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본 것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좋은가’였다.

오늘날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가 문화전쟁의 한 전선(戰線)이라면,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논쟁의 논거들의 옳고 그름보다는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라는 결과가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이어야 한다. 옳은 것(Right)이 반드시 그 결과로서도 ‘좋은 것(Good)’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좌파일색의 한국 문화계 현실

“일반 국민은 보수와 진보가 50대50이지만 문화 쪽은 진보가 거의 98%까지 장악하고 있다.”

작가 이문열 씨는 2013년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이문열 씨가 말한 ‘진보’란 사실 문화계 ‘좌파’라고 해석된다.

이들은 지난 김대중 정권 시절,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마치 영화속 에일리언의 유충처럼 인큐베이팅돼 왔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 숙주의 신체를 뚫고 나오는 ‘체스트 버스터’라는 성체(成體)로 성장했다. 그 결과 문화 좌파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속 ‘괴물’처럼 오늘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

이들의 권력은 문화계에서 그야말로 ‘무소불위’하다.

2010년 보수적 코드의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을 이명박 정권의 문화관광부가 중도 해임했던 배경에는 좌파 문화권력이 있었다. 그 힘은 ‘박정희 미화’라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한 편의 연극을 공공극장에서 퇴출시킨 사례로 이어진다.

민중극단의 연극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등 세 인물을 등장시켜 70년대 경제개발

을 그린 작품이다. 2013년, KBS에서는 60~70년대 현대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정규편성을 놓고 노조와 PD협회가 ‘박정희를 미화하려 한다’는 이유로 편성 저지 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아직 한 편의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에 ‘박정희 미화’라는 딱지를 붙였던 노조는 ‘60,70년대의 현대사를 다루게 되면 자연히 박정희의 치적을 언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실 KBS는 김대중 정권 시절 ‘그때를 아십니까’라는 현대사 시리즈를 방송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KBS내 현대사 기획반이라는 조직이 담당했고 대표적인 좌파성향의 작가들과 PD들이 제작을 맡았다.

이렇듯 문화, 언론 전반에 좌파의 힘이 공고해지면서 문화관광부라는 정부 조직의 관료들도 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연극 ‘한강의 기적’의 공연불가에 대해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극장측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다. 도대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3. 좌파 정권이 키운 기형적 문화권력

이런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 작가가 한 사람 있다. 바로 3권의 전교조 비판서를 낸 바 있는 정재학 씨다. 그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책을 구입하려 했지만 서점에서 책 주문마저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토로했다. 진열도 안할 뿐만 아니라 구입을 신청해도 출판사가 연락이 안 되거나 품절됐다고 한다는 것이다. 정재학씨의 증언을 직접 소개하면 이렇다.

“서점의 좌익화는 출판업계와 서점, 서점과 서점들 간의 강력한 트러스트(trust)가 구축됐다는 증거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비교교 교사에 대한 집단 왕따나 따돌림에서 알 수 있듯이 좌익 출판업자들 간의 담합에 동조하지 않은 출판사 혹은 서점에 불이익을 주는 따돌림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의 서점엔 좌파인사의 책이 잘 팔리고 좌익 관련 서적이 주류를 이루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정재학 씨의 이러한 증언은 그가 출판사와 서점들 관계자들로부터 들어 알게 된 것이다. 실제로 서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나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 시각을 담은 책들은 구경하기 어렵다.

보수 지식인들의 게으름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다. 정부의 출판지원과 같은 정책자금도 대부분 좌파 지식인들과 관계 있는 출판사들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는 ‘문화계의 균형전략’이라는 한 보고서에 의해 폭로됐다. 이 보고서는 ‘과거 정권들이 좌파진영의 문화계에 치중했던 정책지원금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문화계와 정치권에 커다란 쟁점이 되기도 했다.

1차 출판시장이 좌파에게 점령당한 한국의 문화지형은 2차 지형인 영화와 방송에 그 에너지를 공급한다. 공전의 히트를 친 ‘웰컴투 동막골’, ‘JSA공동경비구역’과 같은 영화는 북한 인민군에 대한 동정심에 호소하는 내용이었고 ‘효자동 이발사’와 같은 영화는 보수 정치인들을 비인간적인 존재로 묘사했다.

‘괴물’ 봉준호 감독이 민노당 당원이었다는 점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자유보수진영에서 그러한 역량을 가진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이 대단히 위축됐다는 사실이다. 능력이 없어서일까. 하지만 작가 이문열 씨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함축한다.

“문인들은 보수색(色)을 드러내는 즉시 불이익을 당한다.”

실제로 이문열 씨는 노무현 정권에서 그의 책들이 노사모 세력들에 의해 불타는 ‘책 장례식’을 당했다. 후배 문인들이 울음을 삼키며 그에게 “함께 갈 수 없어 죄송하다”고 말하며 연락을 끊었다는 증언은 그로서도 고백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창비 권력’이라고 불리는 백낙청의 좌파 문화권력은 이후 한국 현대문학을 폐쇄적이고 소아적 자기 분열로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4. 균형을 잃은 정부, 문화의 창달자로서 공영방송의 타락

이렇듯 출판계가 좌파의 권력 중심으로 편제되면서 이 출판으로부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방송계가 좌파 문화 중심으로 떠오르게 됐다. 바로 KBS를 비롯한 방송사의 언론노조가 창설된 1993년부터다.

KBS 방송노조는 민주화의 동력을 타고 공영방송사의 편성권과 인사권에까지 그 힘을 미쳤다. 그 결과 정통 다큐멘터리의 미학을 이어오던 KBS의 많은 PD들이 KBS를 떠났고 그 자리는 정치 PD들이 차지했다. 반미, 반자본 심지어는 종북의 색깔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기에 꽃을 피웠다.

방송은 혁명의 도구였고 따라서 외부의 방송 작가들도 그러한 성향으로 충원돼 갔다. 1차 문화시장의 좌편향 출판서적들이 좌편향 방송물의 소스가 된 결과는 참혹했다.

고품격 문화 다큐멘터리는 찬밥 신세로 전락했고 이념지향적 르포물과 시사보도물들이 다큐멘터리의 형식과 미학을 파괴한 결과 한국의 방송 다큐멘터리는 세계 방송시장에 명함을 내밀지도 못할 만큼 질적 하락을 겪게 됐다.

일본 NHK가 세계 방송 다큐멘터리 시장에서 두각을 발휘할 때 3대 공영방송이라는 KBS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로 추락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저열화에는 문화관광부 관리들의 보신주의와 진보라는 껍데기 좌파에 포획된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의 무관심과 기회주의가 만들어 낸 것이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불균형은 시정돼야 한다.

결론 : ‘종말론’과 ‘지상천국론’의 좌파와 투쟁하는 우파의 문화진지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문화에 내포된 정치성의 본질과 그로인한 헤게모니 투쟁의 불가피성을 살펴보고 한국 현실에서 이 양상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았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 결코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결국 현실을 목적에 맞게 규정하려는 제 정파들간에 정치적 헤게모니 투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화의 정치성을 탈이념적, 탈정치적으로 추구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국 헤게모니를 향한 문화권력 의지를 가진 집단에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 자유-보수 문화인들은 이에 길항적 헤게모니를 창출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게 된다. 그 방법론은 집단, 계급, 젠더, 민족, 생태와 같은 허구적, 전체주의적 문화운동에 맞서서 개인과 자유의 미학, 그리고 인문정신을 드러내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 대표적인 작품에 바로 <국제시장>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영화 국제시장의 갑수는 비록 국가주의안의 한 개인이었지만, 그는 국가주의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부르주아적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든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유-보수의 문화운동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확산하는 것 이어야 하며 그렇기에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좌파의 문화운동이 가진 허구를 드러내야 한다. 이로써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현실은 ‘견딜만한 현실’임을 대중들이 자각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기려 들지 않고, 지지 않는’ 문화운동이야말로 우파가 지향해야 할 미학적 태도라 믿는다.

[토론③]

좌익들의 내로남불, 〈표현의 자유〉

여 명

청년박정희연구회 부회장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만큼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줄임말) 사자성어에 잘 들어맞는 개념이 있을까. 특히 좌익들에게. 예컨대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효수한 형상이나, 2012년 대선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박 대통령의 생식기에서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을 한 아이가 기어 나오는 그림들은 ‘표현의 자유’의 이름 아래 비호 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의 창작물인 노무현 대통령을 코알라에 합성한 작품은 사회 부적응자 일베층의 천인공노할 고인 모독이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가 집회 퍼포먼스용으로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는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 된다.

우선 표현의 자유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한국 최대 포털사이트 NAVER 지식백과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다음부터 이상하다. 어떤 논리에 기반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중 대표적인 것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다. 이 권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으므로 필요한 것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이다. 요약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다.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는 문장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소위 민주 세력들에게 절대 선(善)인 양 악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히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언론과 출판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자주 논란이 되는 이유이다. 전술했듯이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예술아치(‘예술가’와 ‘벼슬아치’의 합성어)들이 (대개 좌익 진영에서) 자신들의 저급한 부산물들을 그 무슨 대단한 정치 풍자물로 승화시킬 수 있는 MD(미사일 방어 체계)급 무기이다. 표창원 의원실의 〈더러운 잠〉 따위의 성희롱도, 홍성담의 〈세월오월〉 같은 정치 음모론도 표현의 자유가 된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것은 맞지만 좌익들은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과장해 선전하고 오용 및 남용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원칙이 표현의 자유라는 문장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은 다양성이다. 그리고 2017년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양성을 해치는 무기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논란은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회주의 선전선동자들은 언제나 자유를 요구하지만, 정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유는 그들이 선전선동할 자유에 불과하다. 대중은 저마다 자기편 대중을 위해서는 이 자유를 요구하면서도 다른편 대중들에게는 용납하지 않으려 애쓴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인가

어려운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창작물을 받아들이는 사회 구성원의 태도가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용인이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 같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는 그 사회의 민도를 나타내는 리트머스지이다.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유저가 왜 일베충이 됐나?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희화화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일베에서 만들어진 노 전 대통령 관련 합성물들을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일베 유저들을 소수로, 별종으로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아니지' 싶은 감정이 보수 성향 인물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만일 '그래도 싸지' 라는 생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효수한 형상이나, 박 대통령의 생식기에서 아버님 얼굴을 한 아이가 태어나는 그림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우리 민도의 수준인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